

# 대학교육 개혁에 있어서 시장경제 논리의 적용과 보완

김 태 기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교무부처장



## 1. 머리말

‘교육’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어려움은 우선 교육개혁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이 논자간에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개혁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개혁이나 시장경제와 같이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를 모두가 공유하는 단일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은 시장경제나 교육개혁의 개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교육개혁에 대한 시장경제 논리의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시장경제 논리’의 개념

### 1) 시장경제란?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하자.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각 자원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들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산출량이 극대화되는지, 또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산된 재

화를 누구에게 얼마만큼씩 배분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신은 알고 있다. 신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를 '신의 결과'라고 하자.

우리의 목표는 신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개별경제 주체의 시장활동을 통해 자원의 희소성을 평가하고 이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신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의해 자원의 희소성이 평가되고, 가격에 의해 자원이 배분된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여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경제란 자원의 배분을 개별경제 주체의 시장활동에 맡김으로써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 2)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론적으로 완전경쟁 시장에서 이루어진 자원 배분은 신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런데 완전경쟁은 어느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수요자나 공급자의 수가 많아야 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완전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장이 불완전하게 되면, 시장경제가 항상 최적 자원배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나 공공재와 같이 소비자나 공급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수요자나 공급자가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결과는 신의 결과와 다르게 된다. 이를 '시

장실패'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신의 결과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런데 어떤 부문이 시장경제에 의해 효율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설령 찾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규제를 통해 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산출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시장 내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때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 3) 시장경제의 논리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흔히 말하는 시장경제 논리는 단순히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에 의한 효율성 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시장경제 논리란 경쟁의 논리로 이해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시장의 도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경제가 있는 부문이나 공공재 부문은 시장에 의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방이 시장경제의 확대로 이해되는 이유도 개방의 경쟁확대 효과 때문이다. 폐쇄경제에서는 공급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반면,

개방은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의 확대로 이해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이다. 경제학자들만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이 없다고 하지만, 시장경제의 도입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3. 시장경제 논리의 교육개혁에의 적용

교육개혁이란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개념, 목표 및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이란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아래에서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대학교육의 개혁에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수요자 중심 교육 : 시장기능의 회복

‘수요자 중심 교육’은 수요자측에 교육의 결정권을 맡긴다는 의미보다는,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학

과간의 벽이 높아서 특정 전공에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전공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즉, 공급자 독점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수학과 모집단위 도입은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된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 폭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은 교수가 담당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요자인 학생의 전공 선택 폭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자인 학과(전공)가 보다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수학과 모집단위는 시장 기능의 회복에 의한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장은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수준의 재화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마찬가지로 복수학과 모집단위는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인력의 신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응용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장래 진로와 관련하여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학과의 정원이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는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신축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 2) 대학 및 교수 평가 : 경쟁과 정보 제공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대학 및 교수에 대한 평가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격이 정확히 평가되

어야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학이나 교수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인위적으로 성과(가격)를 측정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 배분 및 대우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에 있다. 따라서 성과에 의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시장논리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평가의 척도가 합리적이고, 또 그 척도에 의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이나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생산성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따라서 평가의 척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평가 방법의 개선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평가는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야 구매가 이루어지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재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대학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믿지 않고, 기업체에서는 대학에서의 성적을 믿지 않고 있다. 즉, 대학은 내신보다는 수능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고, 기업체는 대학 성적보다는 영어나 면접에 의해 사원을 선발하고자 한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는 수능 준비를 중시하게 되고, 대학생들은 학과 전공보다는 취업을 위한 학원 강좌를 중시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학생들의 교육과정

과 학사관리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학생의 내신성적을 참고하여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신뢰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대학과 교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신뢰성이 형성되면 교육은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기초과학 지원 : 외부효과 부문에 대한 지원 필요

대학의 전공 운영을 전적으로 학생의 수요나 사회적 연구용역 수요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응용학문 분야에 학생의 수요가 몰릴 것이고, 기초과학 부문에 대한 학생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이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기초 분야보다는 응용 분야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응용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기초과학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면, 비록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기초과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경제의 논리 중에서 외부경제가 있는 부문에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하다.

응용 분야에서 기초과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더라도 응용 분야에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여 기초과학을 육성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의 연구 성과가 비경합적 소비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면, 시장에 맡겼을 때 기초과학

의 사회 기여도에 상응하는 충분한 육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있고 공공재적 특성이 있는 교육을 전적으로 시장의 경쟁논리에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논의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논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4. 맺음말

대학의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경제 논리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의 시행 여부를 논의할 때 정책

의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의 긍정적인 최종 효과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많은 논의는 단기적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의 시행을 늦춘다면, 효율성 저하가 누적되어 궁극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다만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문제점들은 정책 보완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조정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

김태기/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이자 교무부처장을 맡고 있고, 캘리포니아 대학(샌디에이고) 객원교수를 지냈다. 저서로 “국제경제의 이론과 현실”(공저)이 있으며 “한국 수출재산업과 수입재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비교 연구”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